

의안 번호	2161	【울산광역시 중구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】 심 사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

1. 심사결과

- 제출 일자: 2023. 10. 6.(금)
- 제출 자: 중구청장
- 위원회 회부일자: 2023. 10. 6.(금)
- 위원회 심사일자: 2023. 10. 19.(금)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개정된 「환경정책기본법」에 따라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전문을 개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구의 책무 및 구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~ 제4조)
- 자연환경 등의 유지·보전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환경보전사업 추진, 환경보전정책 등에 관한 사항(안 제6조 ~ 제8조)
-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(안 제9조 ~ 제14조)

다. 근거법규

-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4조, 제58조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홍정식)

- 개정된 「환경정책기본법」의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규정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조례전문을 개정하는 것으로

-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근거법규

「환경정책기본법」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·보전하기 위하여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유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과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「국토기본법」에 따른 국토계획과의 연계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범위,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58조(환경정책위원회) ⑤ 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, 제2항에 따른 시·도환경정책위원회 및 시·군·구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·도 및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